

### 3. 예산안으로 본 99년도 경영 환경

- (99년도 예산규모)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쳐 올해보다 6.2% 증가한 85조 7,900억 원의 99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
- (적극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) 그 동안의 경기동행적 예산운영에서 벗어나 GDP 대비 5%정도의 재정적자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적 예산정책으로 전환
- (기업에게 주는 시사점) 적극적 재정정책 운영에 의한 다소간의 내수확대는 기대되지만 세수 부족에 따르는 각종 감면제도의 폐지 및 징세행정의 강화 그리고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예상됨

#### □ 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

##### - 예산규모

-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쳐 올해보다 6.2% 증가한 85조 7,900억 원의 99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

#### < 1999년도 재정 규모 >

(단위: 억원, %)

|        | 98예산      | 증가율  | 99예산안     | 증가율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일반회계   | 755,829   | 11.8 | 805,700   | 6.6  |
| - 조세수입 | 592,569   | △7.5 | 623,733   | 5.3  |
| - 세외수입 | 46,442    | 31.0 | 46,967    | 1.1  |
| - 국채발행 | 116,818   | 순증   | 135,000   | 15.6 |
| 재정융자   | 51,800    | 35.5 | 52,200    | 0.8  |
| 순재정규모  | 807,629   | 12.1 | 857,900   | 6.2  |
| 특별회계   | 405,523   | 1.3  | 406,976   | 0.4  |
| 총재정규모  | 1,213,152 | 8.9  | 1,264,876 | 4.3  |

##### - 세입예산

- 국세가 98년도 예산대비 5.3% 증가한 62조 3,733억 원, 국채 발행은 15.6% 증가한 13조 5,000억 원, 주식매각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4조 7,000억 원 등 총 80

조 5,700억 원으로 책정

- 경상성장률 4.2%, 실질성장률 1.8%, 세입증가율 4.6%의 가정하에 편성

- 세출예산

- 일반회계는 80조 5,7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.6%,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조 2,200억 원으로 0.8% 각각 증가

- 통합재정수지

- 13조 5,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% 수준인 22조 1,000억 원으로 예상

□ 평가

- 적극적인 예산정책으로의 전환

- 그 동안의 경기동행적 예산운영에서 벗어나 GDP대비 5%정도의 재정적자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적 예산정책으로 전환
- 이는 금융부문의 재건, 산업기반의 붕괴 방지, 사회적 안정 등을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

- 세수부족 가능성

- 내년도 세입증가율은 경상성장률 4.2%, 실질성장률 1.8% 증가의 가정 하에 추정 한 것임
- 그러나 성장률이 이보다 낮을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
-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주식매각 대금을 2.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식 시장의 장세가 악화될 경우,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공기업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외수입에도 차질이 예상됨

- 경기부양효과 미흡

- 전체 예산증가율이 6.2%인데 반해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SOC투자예산은 5% 증가에 그침. 중소기업과 수출지원예산도 1.8%만 증가

- 99년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더 많은 규모의 SOC투자가 필요함  
→ 이를 위해선 일본과 같이 건설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적자의 확대도 고려할 만함

#### - 간접세 부담 증가

-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수의 감소가 불가피.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교통세 등의 간접세 부담이 증가될 전망 → 세부담의 역진성이 가중

#### -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노력 미흡

-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4.5%의 공공부문 임금만을 삭감한 것은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의지를 의심하게 함
- 국방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0.4% 정도 삭감되었으나 임금삭감 부문을 제외하면 오히려 증액되었음

#### -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미흡

- 예산편성시 예산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등의 예산편성 방식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만, 실제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과 복식부기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필요함

### □ 기업에 주는 시사점

- (조세 부담)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예상됨
  - 기업에 대한 각종 손비인정 등 기존 감면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
  - 탈세에 대한 범칙금 강화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
  -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는 않을 전망이나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위주의 세율 조정은 가능할 것임  
→ 간접세인상이 실행될 경우 내수감소가 우려됨

- (금리) 올해에 이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됨에 따라 구축효과에 의한 다소간의 금리인상 요인이 있으며, 또한 국채발행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화로 회사채 소화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
  
- (수요 기반) 99년도 예산 중 70%를 1/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연초에 총수요확대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
  - 따라서 다소간의 내수확대가 기대됨
  
- (물가) 정부는 5%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음. 그러나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초 대규모의 총수요 확대정책이 진행될 경우 큰 폭의 물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 
- (공공 사업 분야) SOC투자의 경우,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
  - 민자유치의 경우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
    -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민자유치법을 대체하는 『민간투자법(가칭)』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
  - 또한 공공사업 입찰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
    - 정부는 공공사업의 부실시공 및 담합 방지를 위해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의 최저낙찰 수준을 현재 예정가격의 70% 에서 내년부터는 75%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음

(박용주 [yjpark@hri.co.kr](mailto:yjpark@hri.co.kr) ☎724-4033)